

동물용의약품 항생물질의 사용중지가 양돈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인호 위원
양돈협회 방역대책위원회
약제분과위원회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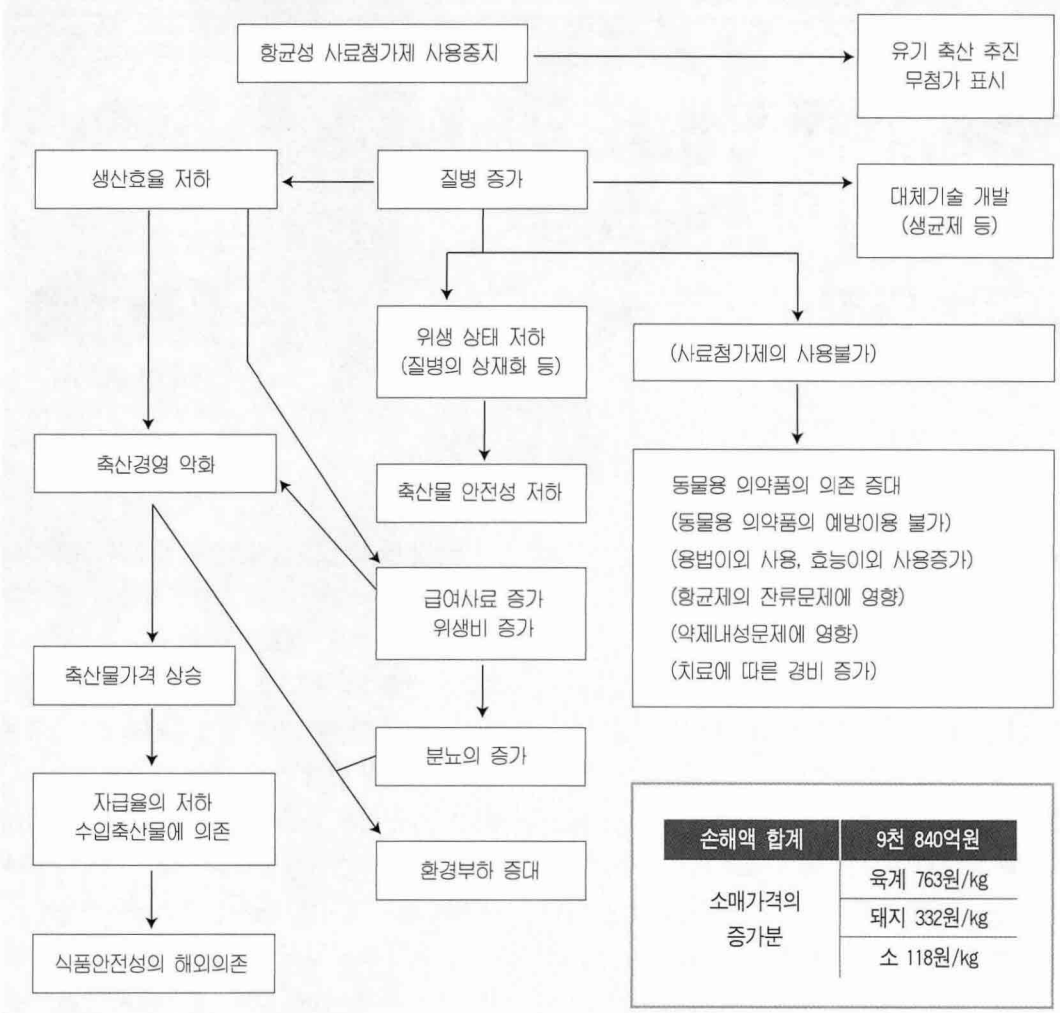
2006년 1월 1일부터 EU는 성장촉진용 항생물질(AGPs)은 수의사의 처방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 사용금지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사료첨가용 항생물질의 사용량과 내성율이 선진 축산국가에 비해서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53종에서 25종으로 감축)에 이어서 2007년에 또다시 7종의 인수공용 항생물질을 내성율이 높고, 인수공용 항생물질이라는 이유를 들어 추가 감축하려는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사료첨가용 항생물질의 추가 감축과정의 진행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 축산국가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선진 축산국가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감축과정의 최대 차이는 선진 축산국가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위험평가(Risk Assessments, RA)의 기준에 근거해서 감축하려는 동향을 나타내는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위험평가에 대한 기준안도 없이 일방적인 감축에 대한 공시가 나와 분쟁을 자초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학자들(2001, 2003)과 일본의 과학사료협회(2003)에서는 EU의 AGPs 사용금지정책을 자국에서도 채택할 경우, 자국의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력의 비교를 실시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EU의 예방주의 원칙을 따를 경우 1조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된 과학사료협회의 보고서를 인정하여(〈그림 1〉 참조) 자국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서 25종 항균제 중에서 16종의 동물전용 항균제는 사용을 허용하고, 인수공용의 9종 항균제에 대해서만 사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 농림수산성(MAFF)과 식품안전위원회(FSC)에서 정밀 실사작업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해당 동물약품업계 관계자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경우(2002, 2003)에도 덴마크나 스웨덴의 상황을 모델로 해서 자국에서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일어나는 변화를 예측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는 연구를 실시하여 EU와의 경쟁력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동물약품협회(AHI)의 매튜(Mathews)회장도 위험평가(Risk Assessments, RA)를 거친 추가감축은 인정

<그림 1> 항균성 사료첨가제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 예측되는 상황(일본과학사료협회 보고서에서 인용)



하지만 EU와 같이 예방주의에 의한 일방적인 감축은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Feed Additive Compendium, 2007), 우리나라에서 일방적인 감축이 진행될 경우 2년 전과 같이 다국적 동물약품업체의 강력한 반발과 항의방문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본 주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국·내외에서 수집, 분석하고 있는 최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최근의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독자들

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우리나라 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금지 정책의 평가

우리나라가 선진 축산국가에 비해서 동물용의약품 항생물질을 과다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이번엔 감축대상이 된 7종의 항생물질에 대한 내성율도 공식(감사원 보고서, 국가항생제 내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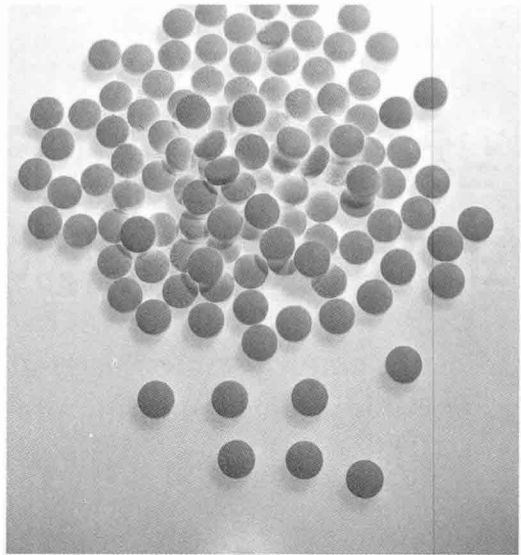
전관리사업 연차보고서) 또는 비공식적(학위논문, 국가공인병성감정기관 발표자료, 임상수의사들의 증언) 으로 확인됨에 따라 동물용 항생물질의 신중사용(Prudent Uses)의 원칙준수를 통한 사용절감에 대한 시민단체와 식품의약품안정 및 소비자원 등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압력은 갈수록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사료첨가용 항생물질의 사용증지 후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정한 감축결정의 여부가 당연히 더 중요하지만, 의료업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생산성관련 평가보다는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더 중시해서 항생제의 사용증지를 통한 내성율의 감소에 더 비중을 두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 의료시장의 규모는 동물용 항생물질 시장규모에 비해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사람에 대한 항생물질의 내성율 증가의 원인은 90% 이상이 의료계 내부의 책임이라는 것은 의료계 스스로가 뒷전에서 인정하는 사실이나, 대외적으로는 이를 와전시켜 축산업계가 사람내성율 증가의 책임이 90% 이상 있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일조를 담당하였고, 이것이 사료첨가용 항생물질의 감축을 위한 당위성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케 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직까지도 현재 국내에서 사용이 승인된 사료첨가용 항생물질의 사용이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는 제시되고 있지 못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사실도 이미 Phillips(2003)와 Bywater(2000, 2005)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총설논문으로 발표하여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음으로써, 의료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일부 수의 관계자들까지도 필립스와 바이워



터를 비롯한 연구자들의 논문은 항생물질 감축에 불리한 자료로 여겨 소개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전술한 연구자들의 논문을 적극 활용해서 동물용의약품 항생물질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일본 낙농학원대학의 다무라 교수, 오시마 동물용의약품협회 상무 등의 활동과는 대조를 나타내고 있다.

3. 맺음말

이번에 고시된 감축대상인 7종의 사료첨가용 항생물질에 대해서도 이들 항생물질이 전체 사료첨가용 항생물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이들 항생물질의 사용감축에 대한 합리적인 과학적 증거 제시를 물론 감축 후에 양돈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한 손익을 따져서 농림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합당하는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성분부터 감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양돈**